

민주 중도강화-좌향좌 노선 갈등

김효석·강봉균의원 등 20명 '중도' 모임 결성

정동영·천정배 최고위원 '좌클릭' 강력 주장

한나라당에서 신·구주류 간 노선 갈등이 일자 민주당 내에서도 이념 및 정체성 대립이 재연되고 있다.

한나라당의 중도층 잡식에 맞서 중도층을 더욱 두텁게 해야 한다는 온건파와 '좌향좌'를 통해 선명성을 부각, 한나라당과 확실한 차별화에 나서야 한다는 강경파가 충돌하고 있다.

이는 '중도' 이미지가 강한 손학규 대표에 김효석 원내대표까지 선출된 상황에 대한 당내 반작용으로 풀이된다. 특히 6월 임시국회에서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가 논의될 것으로 보여 정체성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내 대표적 온건파로 꼽히는 김효석·강봉균·김부겸·우제창 의원 등 20여명은 내달 중 '생활정보모임'(가칭)을 구성, 중도층을 껴안을 수 있는 정책 노선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모임은 무상복지 정책에 우려를 표명했던 이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기존의 '민주정책포럼'을 확대, 재편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효석 의원은 24일 "민주당이 왼쪽으로 갈수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과 지지층이 겹치게 된다"며 "중원을 내주는 것은 대선 패배 구도"라고 말했다.

반면 정동영·천정배 최고위원 등은 '좌(左) 클릭'을 주장하고 있다.

정 최고위원은 한미 FTA 비준안과 관련, "한미 FTA 원안은 당의 보편적 복지국가의 비전과 충돌한다. 따라서 원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원안 재검토까지 주문했다. 기존 당 방침에 '좌클릭'을 더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천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정체성을 분명히 정립하고 국가비전과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확고한 개혁과 온건한 진보의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비주류의 행보에 대해 당 일각에서는 자신들의 정치적 존재를 알리기 위한 전략적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현

도부가 중도로 구성된 만큼, 개혁성향의 비주류 진영이 자기 위치 찾기를 위한 전략적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노선갈등은 이제 시작이 될 것이며, 큰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이날 손학규 대표는 진보·보수라는 이분법적 이념 논쟁의 무의미함을 지적하며 당내 이념 갈등을 경계했다. 손 대표는 KBS1 라디오 정당대표 연설에서 "새로운 정치의 방향은 좌회전도, 우회전도 아니고, 오직 국민을 위해 진진하는 것"이라며 "어떤 이념을보다 바로 민생을 나침반으로 삼아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손 대표의 발언은 향후 정국의 흐름 속에 찾아질 민주당 비주류 측의 이념적 굴레에 갇힌 주장에 대해 일정부분 선을 긋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효석 의원 대권 출마?

"이제 과감한 정치적 도전에 나서라" 동료 권유

"지역민과 소통 통해 도전여부 최종 결정하겠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 (답영·구례·곡성)이 민생을 기반으로 하는 '능력있는 진보'의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권 도전' 가능성에 대해 "이제 과감한 정치적 도전에 나설 시기가 됐다는 동료 의원 등의 권유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우선 3선 의원으로 성장시켜준 지역민과의 소통을 통해 대권 도전 여부를 최종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대표적 정책통이자 합리주의자로 평가받는 김 의원이 대권 도전에 나서게 된다면 중도성향 의원들과 당원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면서 당내 경선구도에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대권 도전에 있어 지역적, 인구적 한계 등을 깨개로 '호남불가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김 의원의 도전이 현실화된다면 지역 정치권에도 커다란 반향을 일으킬 전망이다.

김 의원은 "중도 성향의 민심을 잡기 위해 서는 민주당이 집권해 안정적이며 생산적으로 국정을 펼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

다"며 "이를 위해, 민주당은 민생을 기반으로 보다 현실적인 정책 제시를 통한 '능력있는 진보'의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권 도전' 가능성에 대해 "이제 과감한 정치적 도전에 나설 시기가 됐다는 동료 의원 등의 권유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우선 3선 의원으로 성장시켜준 지역민과의 소통을 통해 대권 도전 여부를 최종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대표적 정책통이자 합리주의자로 평가받는 김 의원이 대권 도전에 나서게 된다면 중도성향 의원들과 당원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면서 당내 경선구도에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대권 도전에 있어 지역적, 인구적 한계 등을 깨개로 '호남불가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김 의원의 도전이 현실화된다면 지역 정치권에도 커다란 반향을 일으킬 전망이다.

/임동우기자 tuim@kwangju.co.kr

서규용 농림장관 내정자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유보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결과보고서에 채택이 유보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서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삐걱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소속 최인기 농식품위원장은 "농식품위는 모든 의안에 대해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양당 간사와 의원 간 조율을 통해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하고 오늘은 채택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농식품위원회들은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차관 출신인데도 업무 파악이 돼있지 않고 정책 비전도 없을 뿐 아니라 '가짜농민' 노릇을 하며 직불금을 수령했고 세금을 탈루한 것에 대해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다소 미흡한 점은 있지만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25일까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이후 10일 이내에 별도 조치 없이 임명절차를 밟을 수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후보자의 4대 거짓해명

"소망교회는 '08년 5월부터
다니기 시작했다." 소망교회에 연금을 '07년 7월부터 냈음
"거짓해명"

"기타수익은 건보료 산정시 포함되지 않으므로,
건보료 축소납부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편법 보조로 축소납부에 대한 영통한 대답
"동문서답"

"배우자는 M씨의 사내이사였고,
사외이사는 이종우입니다." 배우자는 M씨의 사내이사
"거짓해명"

"K와의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보상금을 받아냈습니다." 손해배상 중이 아닌 충재신청과 113억 받음
"거짓해명"

거짓 해명 마세요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유영숙 환경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망교회 거액 현금 '장관 로비용'이었나

국회, 유영숙 환경장관 인사청문회 자질·도덕성 추궁

5·6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는 유영숙 환경부 장관 내정자를 상
대로 도덕성과 전문성 등을 집중 점
검했다.

민주당은 소망교회 고액 현금 및
배우자의 특혜성 급여 등을 강도 높

게 추궁했고 한나라당은 유 후보자의
환경 분야 전문성을 도마에 올렸다.

야당은 유 내정자가 이명박 대통령
이 장로인 소망교회에 지난 2007년부
터 9600여만원의 현금을 냈 배경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유 내정자
는 장관 발탁 배경이 소망교회 신자
였기 때문이라는 의혹에 대해, '소망
교회는 2008년 5월부터 다녔다'며 부
인했으나, 2007년 7월부터 이 교회에
현금을 했다"고 지적했다.

즉, 고액 현금을 정권 실세가 아니
는 교회에 장기간 냈다는 것은 '장관
로비용' '입각 기여금'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이 의원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유 내정자는 "생생 교회
현금이나 기부금을 듣거나 특혜를 바
라고 내본 적이 결코 없다"고 부인했
다.

또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유 내정
자의 배우자가 SK건설로부터 2년7
개월간 받은 12억여원의 급여를 문제
삼았다.

홍 의원은 "유 내정자의 남편이 부
산시 정부부시장으로 근무할 때 SK
건설이 주도했던 '센텀시티' 건설을
계기로 받은 특혜성 급여가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은 "환경에
대한 전문적 식견도 다소 부족해 보
인다"며 전문성 부분을 지적했으며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유 내정자
의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했으나 유
후보자 측은 전면 부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與 정체성 논란 가열…全大이슈 조짐

친서민정책 놓고 신·구주류 '票풀리즘' 갈등

친서민 정책기조를 둘러싼 여권 내
신·구주류 간 노선 갈등이 정체성 논
란으로 확산하면서 전당대회 최대 이
슈로 부상할 조짐이다.

신서민 정책기조를 둘러싼 여권 내
신·구주류 간 노선 갈등이 정체성 논
란으로 확산하면서 전당대회 최대 이
슈로 부상할 조짐이다.

신서민 정책기조를 둘러싼 여권 내
신·구주류 간 노선 갈등이 정체성 논
란으로 확산하면서 전당대회 최대 이
슈로 부상할 조짐이다.

신서민 정책기조를 둘러싼 여권 내
신·구주류 간 노선 갈등이 정체성 논
란으로 확산하면서 전당대회 최대 이
슈로 부상할 조짐이다.

신서민 정책기조를 둘러싼 여권 내
신·구주류 간 노선 갈등이 정체성 논
란으로 확산하면서 전당대회 최대 이
슈로 부상할 조짐이다.

신서민 정책기조를 둘러싼 여권 내
신·구주류 간 노선 갈등이 정체성 논
란으로 확산하면서 전당대회 최대 이
슈로 부상할 조짐이다.

신서민 정책기조를 둘러싼 여권 내
신·구주류 간 노선 갈등이 정체성 논
란으로 확산하면서 전당대회 최대 이
슈로 부상할 조짐이다.

신서민 정책기조를 둘러싼 여권 내
신·구주류 간 노선 갈등이 정체성 논
란으로 확산하면서 전당대회 최대 이
슈로 부상할 조짐이다.

신서민 정책기조를 둘러싼 여권 내
신·구주류 간 노선 갈등이 정체성 논
란으로 확산하면서 전당대회 최대 이
슈로 부상할 조짐이다.

신서민 정책기조를 둘러싼 여권 내
신·구주류 간 노선 갈등이 정체성 논
란으로 확산하면서 전당대회 최대 이
슈로 부상할 조짐이다.

신서민 정책기조를 둘러싼 여권 내
신·구주류 간 노선 갈등이 정체성 논
란으로 확산하면서 전당대회 최대 이
슈로 부상할 조짐이다.

신서민 정책기조를 둘러싼 여권 내
신·구주류 간 노선 갈등이 정체성 논
란으로 확산하면서 전당대회 최대 이
슈로 부상할 조짐이다.

신서민 정책기조를 둘러싼 여권 내
신·구주류 간 노선 갈등이 정체성 논
란으로 확산하면서 전당대회 최대 이
슈로 부상할 조짐이다.

신서민 정책기조를 둘러싼 여권 내
신·구주류 간 노선 갈등이 정체성 논
란으로 확산하면서 전당대회 최대 이
슈로 부상할 조짐이다.

신서민 정책기조를 둘러싼 여권 내
신·구주류 간 노선 갈등이 정체성 논
란으로 확산하면서 전당대회 최대 이
슈로 부상할 조짐이다.

신서민 정책기조를 둘러싼 여권 내
신·구주류 간 노선 갈등이 정체성 논
란으로 확산하면서 전당대회 최대 이
슈로 부상할 조짐이다.

신서민 정책기조를 둘러싼 여권 내
신·구주류 간 노선 갈등이 정체성 논
란으로 확산하면서 전당대회 최대 이
슈로 부상할 조짐이다.

신서민 정책기조를 둘러싼 여권 내
신·구주류 간 노선 갈등이 정체성 논
란으로 확산하면서 전당대회 최대 이
슈로 부상할 조짐이다.

신서민 정책기조를 둘러싼 여권 내
신·구주류 간 노선 갈등이 정체성 논
란으로 확산하면서 전당대회 최대 이
슈로 부상할 조짐이다.

신서민 정책기조를 둘러싼 여권 내
신·구주류 간 노선 갈등이 정체성 논
란으로 확산하면서 전당대회 최대 이
슈로 부상할 조짐이다.

신서민 정책기조를 둘러싼 여권 내
신·구주류 간 노선 갈등이 정체성 논
란으로 확산하면서 전당대회 최대 이
슈로 부상할 조짐이다.

신서민 정책기조를 둘러싼 여권 내
신·구주류 간 노선 갈등이 정체성 논
란으로 확산하면서 전당대회 최대 이
슈로 부상할 조짐이다.

신서민 정책기조를 둘러싼 여권 내
신·구주류 간 노선 갈등이 정체성 논
란으로 확산하면서 전당대회 최대 이
슈로 부상할 조짐이다.

신서민 정책기조를 둘러싼 여권 내
신·구주류 간 노선 갈등이 정체성 논
란으로 확산하면서 전당대회 최대 이
슈로 부상할 조짐이다.

신서민 정책기조를 둘러싼 여권 내
신·구주류 간 노선 갈등이 정체성 논
란으로 확산하면서 전당대회 최대 이
슈로 부상할 조짐이다.

신서민 정